"전입금 '쪼개기 편성' 조례 취지 어긋나…현장 혼란 우려"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기금 의존↑·수당 과소 편성 등 지적

7월 개관 '역사누리터' 운영비 미편성

독서문화 확산 추진 속 도서관 예산↓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광주시의회 전문위원실이 법정전입금 미편성, 기금 의존도 확대, 운영비·수당 과소 편성, 인력 운영 구조의 한계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광주시의회의 2026년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총규모는 2조8천256억6천8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 감소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은 광주시 법정전입금 2천906억6천214만원 중 1천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에 미편성한 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시설기금 등 1천175억원의 기금 사용이 주요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행정협의회를 통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내년도 법정전입금 2천906억원 중 1천906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천억원은 내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이러한 협의가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시가 법정전출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지표 및 건전성 관리에 유리한 단기 효과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시교육청은 전입금의 34.4%(1천억원)가 1회 추경으로 밀리면서 의무경비인 인건비 2개월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조례는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전액 편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시와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례 취지와 다른 '일부 편성'을 협의했다"며 "만약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쇄적인 교육사업 차질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쪼개기 편성' 방식이 관행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추경 시기 미준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전액 편성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전문위원실은 가칭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운영비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며 관련 운영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내년 6월 준공, 7월 개관할 예정이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시설비 73억9천만원과 개관식 예산 1천200만원만 반영됐다"며 "개관 이후 시설 운영을 책임질 조직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 교원과 초·중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과소 편성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명예퇴직수당은 정년퇴직·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적정 규모가 확보돼야 하나, 제출된 예산안의 편성액이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전문위원실은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2027년 완료까지 추정 소요액이 총 356억원임에도 내년도 본예산안에 38억7천600만원만 편성돼 사업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교육청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독서문화 확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도서관 운영 예산은 감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의회,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

16일 본회의 상정 의결 전망

전남도의회가 11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해 올해 안에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의원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한 바 있다.

전남도는 16일 본회의에서 광역연합 규약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행안부 심의를 거친 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장흥군 부산면에서 열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장흥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

국내 유일 체육인 종합교육 거점

전남도는 11일 "대한체육회가 장흥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체육계 주요 인사, 전남도·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의 요람으로서 첫 걸음을 축하하고 비전을 응원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에서 2020년 부지 선정을 전국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장흥군에서 유치했다.

장흥 부산면 지천길 52-25 일원에 총사업비 415억원을 들여 교육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관 등 체육인 교육을 위한 종합단지로 대한민국 유일의 체육인 종합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

체육인재개발원은 향후 국내 체육인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예정이다.

다양한 체육인 교육은 전국 체육인의 교류와 정보 교환으로 전남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타지역 체육인의 매력적 전남 관광지 방문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아 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한체육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보급 힘 모은다

전남도·기후부·한전·에너지공단 협약

전력망 확충·산업 생태계 강화 등 협력

전남도는 11일 해남 솔라시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자체와 기후부 간 첫 협약이다. 전남이 국가 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 상생 기반 마련,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전성 강화, 유관 산업 생태계 강화와 혁신기술 개발 등이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기업 유치, 산업 경쟁력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가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협약기관과 지방·유역환경청이 공동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이 공식 출범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상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대응단은 권역별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한전·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햇빛·바람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전력망 구축 등 현안의 입지 발굴과 적합성 컨설팅, 금융지원 연계를 통해 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 재생에너지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 주제발표에 이어 ▲초고압직류송전(HVDC) 조기 구축 ▲지역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계통 효율화 설비 대규모 투입 ▲해상풍력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진도 집적화단지 추가 지정 등을 건의했다. /양시원 기자